

제 168 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저성장기 일본적 복지의 한계와 비영리조직

강연자: 타케다 하루히토 (武田晴人) (동경대학 대학원 경제학 연구과 교수)

동경대학 대학원 경제학 연구과의 타케다 하루히토 교수의 세미나가 3월 25일 국제대학원 GL룸에서 열렸다. 본 세미나는 '저성장기 일본적 복지의 한계와 비영리조직'이라는 주제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2시간동안 진행되었다.

타케다 하루히토 교수는 현재의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 도래한 가운데,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운을 떼며 이러한 행정비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서비스를 대신할 비영리조직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일본은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이 현재 안고 있는 국채다. 이 국채를 해결하기 위한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일본 사회는 나라로부터 사회복지의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시민을 위한 공적 서비스의 삭감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일본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 중 하나의 대안으로서 타케다 하루히토 교수는 비영리조직 정부 대신에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의 비영리조직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계기로 일본은 볼런터리 형식의 활동이 점점 활발해져,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비영리조직은 공적 서비스의 한계점을 시민들이 채워가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영리조직에도 문제점은 있는데 나열하자면 볼런티어 활동에 대한 관심 대비 경험 유무의 낮은 비율, 자금의 조달문제, 그리고 기부금과 NPO간의 미스매치 등이 있다. 첫번째 문제점인 경험 유무의 낮은 비율은, 비록 시민들은 볼런티어 활동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시간의 제약,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볼런티어 활동을 시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그 원인이다. 예를 들어, 30대의 경우 직장과 볼런티어 활동을 동시에 하면서 생활하기에는 시간의 제약이 있다. 또한, 혹여나 시간이 제약이 없어 활동을 하고 싶어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있어 활동을 주저하는 상황이 생긴다. 두 번째 문제점인 자금 조달의 문제의 경우, 회비만으로 조직을 지속해 나아가는 소규모 비영리조직이 있는 반면, 인정법인을 받은 대규모 비영리조직의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지속성을 평가 받아 보조금을 받는 형식으로 조직을 연명해 나아갈 수 있다. 즉, 영리기업과 다르게 비영리조직은 이익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도 생겨, 미래에 여러 분야에서 어떠한 일을 할 지 고찰할 때 금전문제 활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많은 시민들이 기부를 하였는데 그 기부를 한 곳을 보면 거의 다 유명한 비영리조직이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시민들은 기부를 할 때 기부금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되는 루트를 보여주는 조직에 기부를 하는 경향이 큰데, 이것은 즉 비영리조직의 신뢰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타케다 하루히토 교수는 분석하였다.

타케다 하루히토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 비영리조직평가연구회를 창설해 비영리조직을 어떠한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09년에 '엑셀런트 NPO 평가기준'을 만들어 비영리조직의 훌륭한 활동을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기부 혹은 볼런티어 활동을 하고 싶을 때 그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질의응답

질문: 일본은 세금은 낮지만 국민들이 돈을 많이 써서 적자가 되는 상황이라 해결방법으로 NPO를 낸 것이라고 한다. 그럼 왜 일본은 세금을 높게 내도록 하지 못하는 것인가? 일본의 NPO는 활동을 하면서 복지국가가 아니지만 복지 관련을 활동을 많이 하는 호주나 미국과 같은 국가를 목표로 하는 것인가? 또한 한국의 경우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자면 이것은 일본의 정치 구조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설득을 한 정치인은 많지만 실행을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실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사실 이러한 국가가 되기보다 일본이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빚을 빠른 시일 내에 없애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직 연구 해야 할 부분이지만 한국도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

질문: 정부의 역할을 NPO가 대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답변: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 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사회에서 어떠한 부분은 영리기업만이 해결할 수 있다던가 또는 정치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분야는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다리를 만들 때도 영리기업이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결정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 사회가 만족 해야 할 부분은 많지만 그 기본적인 부분을 나라가 해주느냐 비영리가 해주느냐 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점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다.

질문: 이전과 다르게 현재의 비영리조직의 활동은 그 책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점이 보인다. 또한 조직의 본래 활동 이외의 일을 행하는 것이 보이는데. 즉, 운영하면서 행정기준에 에 만족하는 일이 있다는 것인가?

답변: 현재 비영리조직은 행정을 위해 일을 하거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일을 행하는 면이 보이기도 한다. 기준에 부합 해야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시민사회에서 원하는 것은 좀 더 간단한 기준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